

표준어 규범 영향 평가의 결과

장소원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들어가기

‘표준어 규범 영향 평가’ 사업은 2011년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의 담당 사업 중 하나인 ‘다양한 어문 규범 관련 연구 및 영향 평가’의 일환으로, 현행 표준어 규범에 대한 국민(일반인, 전문가)의 평가를 받고, 이 규범을 외국의 관련 정책, 규정 운용 방식과 비교함으로써 표준어 규정의 형식, 운용 및 표준어 개별 항목의 타당성 등을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의 배경이 된 국어 기본법의 조항은 4대 어문 규범-한글 맞춤법(1988. 1. 19.), 표준어 규정 및 표준어 발음법(1988. 1. 19.), 외래어 표기법(1986. 1. 7.),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2000. 7. 7.)-을 대상으로 ‘어문 규범 영향 평가제’를 도입하고자 한 제12조이다.

현행 표준어 규범이 대부분 1980년대에 정비된 것으로, 그동안 달라진 언어 환경의 변화와 국민의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표준어 정책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타진할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먼저 ‘표준어 규범 영향 평가’ 사업의 개요를 정리한 후, 이어서 이 사업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소개하기로 한다.

2. ‘표준어 규범 영향 평가’ 사업의 개요

2.1. 사업 배경

2.1.1. 표준어 개념의 도입

우리나라에 처음 표준어가 도입된 것은 1930년대로, 조선어 학회의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 이후 그 후속 작업으로 이루어진 1936년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이 최초의 표준어 규범이지만, 그에 담겨 있는 어휘는 9,500여 개에 불과하다. 이는 표준어 규범의 완성이 라기보다는 완성을 위한 예비 작업의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도 있으나, 이후 표준어에 관한 논의도 여기서 멀리 나아가지는 못하였다.

2.1.2. 정부가 추진한 표준어 개정 작업

진정한 의미에서 국가적 차원의 표준어 정책은 정부에서 표준어 개정 작업에 착수한 1970년 4월 국어조사연구위원회를 구성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표준어 규정의 개정 작업을 위탁한 문교부에서는 국어조사연구위원회에 의뢰, 문제성이 있는 어휘 16,500여 개를 사정하였고, 그 결과를 1985년 학술원 산하의 국어연구소에 재검토, 보완하도록 하여, 1988년 1월 문교부 고시 제88-2호로 표준어 규정을 고시하였다. 하지만 표준어 규범에 담긴 내용이 어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표준어 전반을 담아내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2.1.3. 표준어 규정의 검토 필요성 대두

이 사건 표준어 규정은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인바, 이는 표준어의 개념을 정의하는 조항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법적 효과를 갖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의 자유나 권리를 금지·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헌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2006헌마618 표준어 규정 제1장 제1항 등 위헌 확인
(국어 기본법 제14조, 제18조)에 대한 【결정 요지】 [2009. 5. 28.]

이는 표준어 규정 제1장 제1항과 국어 기본법 제14조, 제18조 등이 지역어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성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에 초·중등 교육 과정에 지역어 보전,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의 교과를 편성하는 것에 관한 작위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공공 기관의 공문서를 표준어 규정에 맞추어 작성하도록 하는 구 국어 기본법의 규정들이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등을 판단해 달라는 시민 단체의 헌법 소원에 대해 헌법 재판소가 내린 판결 내용이다. 이는 더 이상 표준어 규정이 모든 국민에게 당연히 준수해야 할 규범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건으로, 이제는 표준어 규정을 심층적으로 검토할 시점에 이르렀음을 보여 준다.

2.2. 연구의 필요성

2.2.1. 표준어 규정의 적합성 논의의 필요성

《새국어생활》 2004년 봄 호(제14권 제1호)는 ‘표준어 정책, 비판적 접근과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의 특집호로 발간된 바 있다. 이는 표준어 규정이 제정, 고시된 후 어느덧 20여 년의 세월이 흘러 현행 규정의 적합성을 다시 논의할 시점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2006년 시민 단체의

표준어 규정 및 국어 기본법 조항에 대한 헌법 소원에서 비롯한 2009년 헌법 재판소의 판결 역시 표준어 규정의 적합성을 다시 논의할 시기가 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2.2. 표준어에 대한 국민의 인식 파악 필요성

최근 들어 급속한 속도로 모바일 환경이 확대되면서 효율성을 위주로 하는 언어 사용 실태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이는 일반인들의 ‘표준어’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바, ‘표준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파악하여 이를 표준어 규정의 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2.2.3. 복수 표준어의 확대를 위한 절차 확립 필요성

위에서 지적한 현대의 언어 사용 환경은 외래어 또는 외국어를 사용함으로써 순화어와 구별되는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표준어와 지역 방언을 동일하게 사용하기도 하는 등 복수 표준어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표준어 규정은 이러한 언어 사용 양상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따라서 복수 표준어를 확대하기 위한 절차를 확립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2.2.4. 언어 사용 환경의 고려 필요성

표준어 규정이 제정, 고시된 시점과 비교할 때 현재의 언어 사용 실태는 훨씬 복잡, 다양해졌고, 언어 사용자가 지향하는 ‘표준어’의 기준도 훨씬 더 유연해졌다. 이는 한 형태의 어휘를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발음하고 표기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외래어와 지역 방언, 은어, 신조어의 사용 확대로 이어지고 있어 이러한 사용 환경을 고려하고 이를 반영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2.2.5. 《표준국어대사전》의 보완 필요성

1999년, 국립국어연구원은 국민 언어생활의 표준을 제공하고 남북한 언어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표준국어대사전》을 출간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은 모든 사전이 그러하듯이 지속적인 관리와 보완이 필요하다. 이는 《표준국어대사전》의 보완을 위한 실태 조사와 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의 제4장에서 행한 ‘개별 표준어 항목에 대한 실태 조사’의 결과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어휘 목록을 선정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2.3. 연구 목적 및 대상

현실에 적합한 표준어 정책을 찾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업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구체적인 과업을 목적으로 삼고 진행되었다.

2.3.1. 외국의 표준어 관련 정책 조사

일본, 중국, 미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인도네시아 등 외국에서의 표준어 또는 공용어와 관련한 정책과 제도 및 법과 시행령 등을 검토하였다. 그 조사 결과를 우리의 표준어 규정의 내용, 사용 실태와 비교, 검토함으로써 각각의 정책이 지니는 효과를 검증하고 표준어 규정의 개정 시점에서 기준과 방향의 설정에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행한 작업은 다음과 같다.

- ① 우리나라 표준어 정책의 어제와 오늘에 대한 정리
- ② 외국의 표준어(공용어) 관련 정책, 제도, 법률 현황 조사
- ③ 한국과 외국의 표준어 정책 비교
- ④ 북한의 문화어와 문화어 정책에 대한 조사
- ⑤ 우리나라 표준어 정책의 나아갈 길 모색

2.3.2. **현행 표준어 규범에 대한 국민의 의식 조사**

이 조사는 일반인과 전문가가 표준어에 대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하여 표준어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사는 일반인 설문 조사와 전문가 심층 면담 조사, 그리고 전문가 설문으로 구성되었다.

① **일반인 설문 조사**

이 조사는 전 국민의 언어적 특성을 파악하기에 충분히 유효한 숫자인 3천 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면 대 면 조사를 실시하여 표준어 규정에 대한 인지도, 이해도, 수용도, 선호도를 파악하였다.

② **전문가 심층 면담 조사**

이 조사는 한국어 연구자, 언론인, 사전 편찬 관련자 등을 대표하는 40명을 대상으로 1:1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조사에서는 전문가가 표준어에 대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하여 표준어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③ **전문가 설문 조사**

이 조사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일반인 대상 설문 결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실시한 설문으로 이를 통해 전체 경향, 지역별 경향, 직군별 경향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

2.3.3. **개별 표준어 항목에 대한 실태 조사**

이 조사는 개별 표준어 항목에 대한 표준어와 비표준어의 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사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하였다.

- ① 21세기 세종 계획 말뭉치 속의 비표준어 자료 조사
- ② 국어 시험의 표준어 관련 문항 조사
- ③ 방송 언어 실태 분석에서 지적된 표준어 항목 조사

2.3.4. 표준어 규범의 운영에 관한 개선 방안 도출

① 표준어 정책의 방향 제시 및 규정 개선 방향의 도출

이후 우리나라의 표준어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향후 표준어 규정을 개정할 때 취해야 할 방법론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② 표준어 심의 기준 및 절차의 제시

표준어 사정의 기본 원칙을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세부 원칙과 단수 표준어와 복수 표준어 선정의 기준 등 표준어 선정의 기준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표준어 선정의 대상 및 선정 절차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였다.

3. ‘표준어 규범 영향 평가’ 사업의 결과

이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진행한 조사와 연구로부터 얻어진 결론을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한다. 먼저 3.1.에서는 본 연구에서 시행한 세부 주제별 결론을 요약·정리하고, 3.2.에서는 표준어 정책과 관련한 개선 방안으로 표준어 규정의 개선 방향과 표준어 심의와 관련한 기준 및 절차에 있어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3.1. 주제별 결론

3.1.1. 외국의 표준어 관련 정책 분야

우리나라 표준어 규정의 어제와 오늘을 정리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 표준어 규정이 담고 있는 표준어의 모습이 무엇이었던가에 대한 답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표준어 규정이 담고 있는 표준어의 모습은 발음과 문법과 어휘 등의 우리 국어 전반의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범위를 어휘에 국한하더라도 우리 어휘 전반적인 모습과는 여전히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각국의 표준어 정책의 현황을 검토한 결과는 구체적인 답을 구하고자 하였던 우리의 기대와는 거리가 있었다. 일본, 중국, 미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 인도네시아에서는 우리와 같은 형식의 표준어 정책을 가지고 있는 국가를 찾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표준어 정책을 추구하던 일본조차도 공용어 정책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미국, 스페인, 독일은 표준어에 관한 명시적인 태도를 표명하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각국의 표준어 또는 공용어에 관한 정책은 각기 형편에 맞추어 시행되고 있으며, 그의 교육과 보급 방식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외국의 표준어 정책은 우리의 그것과는 거리가 있었다. 각국의 언어 사용 환경과 배경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다문화 사회로 변하고 있는 우리도 지향하여야 할 방향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북한의 문화어와 문화어 정책에 대한 정리 작업은 늘어 가는 새터민에 대한 표준어 교육이라는 측면과 통일을 대비한 언어 정책을 염두에 둔 조처였다.

3.1.2. 표준어 규범에 대한 국민의 의식 조사 중 일반인 설문 분야

‘표준어’와 ‘표준어 규정’의 차이에 대해 교육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는 일반인은 표준어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나, 표준어 규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표준어’와 ‘표준어

규정'의 차이에 대해 정확하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아울러 표준어 규정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상황에서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하고, 표준어를 알기 위해서는 사전을 참조해야 함을 인식시켜야 한다. 또 표준어 규정 속 정의 부분의 '서울말'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표준어의 기준이 '서울말'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교육,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일부 설문자의 학력 및 연령 차이에서 표준어 교육에 의한 효과가 보이므로, 표준어 교육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가와 비교할 때 일반인에게서 표준어 규정의 개정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나타나는 데서 일반인에게 '표준어 규정'이 그만큼 강력한 제약으로 느껴진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표준어 규정이 일상의 언어생활을 편리하게 할 목적으로 표준어를 결정하기 위한 원칙이지, 일반인들의 언어생활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전문가에 비해 일반인에게서는 복수 표준어 선호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인들에게 표준어가 '맞고 틀림'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복수 표준어의 확대 이유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향후 표준어 정책의 방향은 일반인이 표준어가 되기를 바라는 어휘와 현재의 표준어 사이에 차이가 발견되므로, 가능한 한 복수 표준어를 확대하여 표준어 규정과 표준어 제정이 일반인의 언어생활을 원활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3.1.3. 표준어 규범에 대한 국민의 의식 조사 중 전문가 면담 분야

표준어 규정의 정비 작업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작업은 '표준어'와 '외래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각각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다. 또한 표준어 규정 제1항의 '교양'과 '두루 쓰는'에 대한 기준을 표준어 규정의 해설에서 일반인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로 설득력 있게 풀어 주어야 하며, 표준어 규정의 성격이 의사소통을 도와주기 위

한 것이지 규제하기 위함이 아님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표준어 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표준어에 대한 권위 부여’, ‘사전 편찬 기준 제공’, ‘표준어 선정의 원칙에 대한 일반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할 때 표준어 규정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현행 표준어 규정이 안고 있는 형식상의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할 수 있다. 먼저 “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은 “ㄱ을 표준어로 삼는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현재의 규정은 원칙이라고 하기보다는 예시를 보여 주려는 측면이 강한데 예시 단어 중에는 현대인에게 생소한 단어가 많으므로 사용 빈도가 높은 단어로 바꾸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규정이든 예외가 많으면 그 규정이 어렵게 느껴진다는 점에 유의해서 가능한 한 예외를 많이 만들지 않는 방향으로 규정이 수정되어야 한다.

또 현행 규정에서 보완 및 심의를 필요로 하는 표준어 규정 항목은 제7항, 제8항, 제11항이며, 심의를 필요로 하는 단어 목록은 별도로 제시하였다.

‘표준어’의 선정 절차와 관련해서는 말뭉치 및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한 후 ‘폭넓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를 토대로 심의를 진행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일반인 설문 결과와 전문가의 의견 청취 결과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매번 일반인 대상 설문을 진행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이때 실태 조사의 범위는 표준어 규정의 ‘서울’을 확대하여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리고 ‘폭넓은 전문가’는 각급 학교 교사와 국어학 및 외국어 전공 교수, 방송, 출판, 신문 계통 종사자 및 국어 운동 관련 인사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며, 좀 더 구체적으로는 국립국어원에서 표준어 1차 심의 인력으로 인력풀을 등록받은 후, 그 인력풀에서 100명을 표집하여 2년 정도 심의를 맡기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1차 심의 인력 대상의 설문 결과를 토대로 최종 심의 자료를 만들어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기타 사항으로 본 사업에서 면담을 진행한 국어 전문가의 대부분은 복수 표준어의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3.1.4. 표준어 규범에 대한 국민의 의식 조사 중 전문가 설문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먼저 표준어 규정 총칙에 대한 질문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현행 표준어 규정 총칙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32.5%가 부정적 견해를 표했으며, 심층 면담 결과와 관련지을 때 ‘교양 있는’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언어 변화의 수용과 관련하여 이들은 발음 변화 및 방언형의 확산에 따라 표준어가 변할 수 있다는 점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특히 방언형의 확산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92.5%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따라서 전문가 집단은 방언을 수용하는 데 관대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복수 표준어의 확대에 있어서 전문가들은 복수 표준어의 확대를 지향하는데, 특히 뜻은 같으면서 발음에서는 차이를 보이는 단어가 모두 널리 쓰이면 이들을 복수 표준어로 삼는 것에 긍정적이었다. 특이한 점은 전문가들은 더 이상 쓰이지 않는 단어 대신 현재 널리 쓰이는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전반적으로 긍정적(72.5%)이나, 부정적인 견해(15%)가 일반인(7.3%)의 두 배에 이른다는 것이다.

‘표준어’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표준어는 필요하며, 공적인 상황에서 사용하여야 한다고 답했으며 표준어 규정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는데, 특히 교사들은 표준어 규정을 강력히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표준어 규정의 교육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주로 신문과 출판계 종사자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 이는 표준어 규정의 교육보다 표준어를 사용하는 이유를 가르치고, 표준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을 이용하는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표준어 규정의 개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89.7%가 표준어 규정을 정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답하였다. 이는 표준어 규정 개정의 이유로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서 언어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므로'를 든 것은 규정 자체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인 것이다.

3.1.5. 개별 표준어 항목에 대한 실태 조사 분야

① 말뭉치에서의 표준어 사용 실태 분석

구어 말뭉치를 확대하고, 정제되기 이전의 문어 자료를 확보해 말뭉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말뭉치는 매우 정제된 것이기 때문에 비표준어가 사용된 것이 매우 드물다. 따라서 이러한 말뭉치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비표준어의 사용 양상을 정확하게 분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태 조사는 말뭉치를 대상으로 하되 연역적인 방법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표준 어형 및 비표준 어형을 중심으로 이들의 사용 양상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의 작업은 기존의 말뭉치를 대상으로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모든 어형들의 빈도와 사용 비율을 추출하는 것이었는데, 이 방법은 동음이의어 및 동일한 활용형 때문에 정확한 분석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말뭉치를 대상으로 한 표준어 사용 양상 분석 결과를 볼 때 추후 개정 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거푸집 / 곤색 / 굵신거리다 / 나염 / 나으리 / 널부러지다 / 늘어붙다 / 땡초 / 막동이 / 사그라들다 / 사랑놀음 / 새길 / 속얇이 / 송글송글 / 알타리무 / 어줍잖다 / 여지껏 / 입마 / 정한수 / 지리하다 / 푸드득 / 향그럽다 / 후두둑 / 히히덕거리다

② 국어 시험의 표준어 관련 문항 분석

국어 시험에 출제된 어휘 항목들 가운데는 표준어 규정의 각 항목에 예로 제시되지 않았으나 전문가들이 표준어와 비표준어의 구분에 혼란이 있다고 판단하는 예들이 있었다. ‘갑절:곱절, 사흘날:사흘날, 치르다:치루다, 엔간하다:웬간하다’ 등이 그러한 예들이다. 이는 표준어 규정에 제시된 예들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 표준어와 비표준어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표준어 규정 속의 예를 언어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표준어 규정의 적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방언과 표준어의 구분, 구어에 자주 쓰이는 예 가운데 표준어와 비표준어의 구분도 중시하고 있다. ‘시방, 육보다, 식겁하다’와 같이 방언으로 오인되는 표준어, ‘인제, 퍼뜩, 노상’과 같이 비표준어로 오인되는 구어 표준어의 경우 사전을 참조하지 않고는 어떤 것이 표준어인지 알기 어렵다. 일반인들이 이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국립국어원 누리집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국어 시험에서의 표준어 관련 문항에서는 ‘웃-’, ‘읽-’을 다루는 제12항 및 ‘수-’, ‘숫-’을 다루는 제7항과 관련된 항목이 자주 출제되는 것은 시험 출제의 용이성뿐 아니라 규정 자체의 복잡함에도 이유가 있다. 따라서 규정 자체를 좀 더 쉽고 명료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

③ 방승 언어 말뭉치에서의 표준어 사용 실태 분석

방승 언어 말뭉치에서 지적 빈도가 높은 비표준어 가운데에는 표준어 규정의 각 항목에서 예로 제시된 어휘 항목들이 거의 없다. 이는 표준어 규정의 예가 실제로 사용되는 언어와는 거리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으로, 표준어 규정의 예를 언어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방승 언어 말뭉치의 지적 사항에 포함된 표준어 관련 항목 가운데는 구어체의 특정한 발음 경향과 관련된 예가 많다. 그 이유

는 구어체 발음을 문어체 발음에 입각하여 지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어체로 발음된 어형을 모두 비표준어로 간주하지 않고 표준어로 인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현재 구어와 문어의 구분 없이 적용되는 표준어 개념과는 다른 ‘구어 표준어’ 개념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방송 언어 말뭉치의 지적 사항에 포함된 표준어 관련 항목 가운데는 어미와 조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간의 표준어 논의나 표준어 규정은 다분히 어휘 중심적이었으므로 이와 달리 조사나 어미의 표준어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3.2. 표준어 정책과 관련한 개선 방안

3.2.1. 표준어 규정의 개선 방향

표준어 규범 영향 평가 사업에서는 표준어 규정의 개정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므로 표준어 규정의 개정을 전제로 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념과 관련한 개선 방안으로는 ‘표준어’와 ‘외래어’의 개념을 정립하고, ‘구어 표준어’ 개념을 도입하며 ‘표준어’와 ‘표준어 규정’의 차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과 아울러 ‘표준어’의 정의를 수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안되었다.

다음으로 표준어 규정의 내용에 관한 개선 방안으로는 ‘총칙’의 내용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표준어 규정의 예를 언어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복수 표준어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안되었다. 또 조사나 어미에 있어서의 표준 어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방언으로 오인되는 표준어, 비표준어로 오인되는 구어 표준어에 대해서는 별도의 홍보를 시행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표준어 규정을 정기적으로 개정해야 하는 이유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할 것을 제안하였다.

3.2.2. 표준어 심의와 관련한 기준 및 절차에 있어서의 개선 방안

표준어의 심의를 위한 준비 단계로는 표준어 사정을 위한 구어 말뭉치를 구축하는 일과 비표준어 사용 양상 분석을 위한 별도의 말뭉치 구축을 생각할 수 있다. 현재와 유사한 문어 말뭉치는 표준어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음을 고려하여 표준어 사정을 위한 별도의 구어 말뭉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구체적인 '표준어'의 선정 절차를 단계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말뭉치 조사

말뭉치를 바탕으로 다양한 변종이 존재하는 어형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다. 여기서는 기존의 규정에서 다루었던 단어는 물론이며, '웬스레/웬시리, 수군거리다/수근거리다, 숙맥/쑥맥' 등과 같이 많이 쓰임에도 불구하고 규정에서 다루지 않았다고 비판받았던 단어들을 비롯하여, 발음 변화로 인한 변이형들이나 어휘적 차원의 변이형들 그리고 새로 등장한 신어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도 행해야 한다.

② 연구의 병행

표준어 사정이 별도로 필요한 단어의 유형 분류에 대한 연구나 신어의 표준어 등재 기준 연구 같은 이론적 바탕 연구를 먼저 수행하거나 실제 자료 정리와 병행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③ 언어 사용 실태 조사

실태 조사의 범위는 표준어 규정의 '서울'을 확대하여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며 실태 조사에서 고려하여야 할 어휘로는 자연스러운 언어 변화에 의해 1988년에 표준어로 규정하였던 형태가 고행(古形)이 된 것

과 1988년에 미처 사정의 대상이 되지 않아 표준어로서의 자격을 인정 받을 기회가 없었던 것, 방언, 신조어 등이 세력을 얻어 표준어로 편입 될 가능성이 있는 것과 현재 표준어로 선정되어 있지만 ‘교양 있는 현대 서울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신조어의 경우는 일시적인 사용 비율만으로 표준어로 선정할 수 없으므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꾸준히 사용되어야 표준어로 선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④ 폭넓은 전문가 의견의 청취

여기서 ‘폭넓은 전문가’는 각급 학교 교사와 국어학 및 외국어 전공 교수, 방송, 출판, 신문 계통 종사자 및 국어 운동 관련 인사로 구성한다. 일반인 설문 결과와 전문가의 의견 청취 결과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매번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전문가 인력풀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훨씬 경제적인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다. 심의 인력풀의 구성 및 심의 의뢰 과정은 국립국어원에서 표준어 1차 심의 인력풀로 인력풀을 구성한 후, 그 인력풀에서 100명을 표집하여 2년 정도씩 심의를 의뢰하고, 표준어로 선정되지 않았던 단어의 사용 비율이 1차 심의 결과 기준으로 정한 비율(예를 들어 60% 또는 70%) 이상이 되면 표준어 선정 대상으로 삼아 이를 표준어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와 공청회의 개최

표준어 심의위원회에서 표준어로 선정된 어휘는 전문가의 공청회 등을 거쳐 표준어로 결정한다.

⑥ 새롭게 확정된 표준어의 관리 및 홍보

새롭게 표준어로 결정된 어휘는 국립국어원 누리집 등에 공시하고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하며 이들은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별도의 난을 만들거나 포털 사이트에 링크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한다.

4. 마무리

‘표준어 규범 영향 평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연구진들은 부분 개정이든 전면 개정이든 표준어 규정의 정비가 새로운 표준어를 양산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현행 규정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는 표준어 위주의 어문 생활을 비교적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준어 규정의 정비는 지금의 표준어 규정이 보다 명확한 원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